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돼선 안돼”

민주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대통령 사면 관련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적권 내 아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

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 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과거부터 우리 경

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 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



최훈 행정부지사는 6일 환경부를 찾아 새만금 상류 오염원 해소 및 정체수역 호내 대책 추진 등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반영을 피력했다.

“새만금 수질개선책 차질 없이”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희망 응원 행복상자 전달

최훈 행정부지사, 환경부 찾아

전북도가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막바지 예산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최훈 행정부지사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막바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지사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새만금 상류 오염원 해소 및 정체수역 호내 대책 추진 등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반영을 피력했다. 부안 양지항과 군산 하계항 일원은 민(灣) 형태로 정체수역이 형성되고, 육상 오염물질이 호내로 유입돼 물고기 폐사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모니터링, 산소공급, 흐름 발생장치 설치 등 정체수역에 대한 적극적인 호내 대책 추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조사 및 설계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6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이올려, 김제시 최대 축산단지인 용지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축산오염원이 새만금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익산 왕궁정착농원 진여 현업축사 전당 매입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비 등으로 2022년 국비 310억 원 반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남지역(도산서원, 선비수련원 등)에 편성된 유교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호남지역 유교문화의 중추적인 공간으로 활성화 및 차별화를 위해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기본계획용역비 등으로 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를 찾아 개별의 해양생태 자원과 근대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염전을 연계 활용한 해양생태관광 거점 마련을 위해 노을갯벌 생태 플랫폼 구축사업에 필요한 국비 10억 원 반영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시·도지사도 국가사무인 근로감독 업무 수행 가능”

민주 윤준병 의원, 안경덕 고용부장관 후보 청문회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최근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도지사의 근로감독 업무 수행이 ILO 권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일반행정기관이나, 특별행정기관의 지위 차이일 뿐 국가기관으로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근로감독에 대한 지휘역시 ‘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검사가 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밑에 두어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지휘 감독하는 것과 같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 권고에 위배된다며 거부만 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전향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동일 노동일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또, 안경덕 후보자에게 “지금 청년세대가 느끼고 있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바로 ‘공정’이라며 IMF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면서 불평등·불공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만큼 노동분야에서 공정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에 노동현장에서 비

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환경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선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우대해야 한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제도 간 갈등·내부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을 만들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비정규직 우대임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공정’의 가치를 노동시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부정책 방안이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윤 의원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서면질문에 안경덕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

“관리·감독소홀이 새만금개발 지연”

민주 신영대 의원 ·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 상호협력 요구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상호협력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군산시는 6일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4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공제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SK건설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



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시와 군산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 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MW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물러대지만 하다가 일언반구 없이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정에 따라 사업 민관협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회의 안전심사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그간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부여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과 공모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공모사업의 개발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에 속하는 구역으로 환경부에서도 관공제마공원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회를 구성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형 사업을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또 새만금청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해당 지자체와 공문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임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마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의 강입준 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숲길조사원 추가 모집

등산·트레킹지원센터, 9일까지 480명 2차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손중호)는 비대면 정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4,000개 봉우리를 대상으로 ‘숲길 자원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숲길조사원 480명을 2차로 오는 5월 9일까지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숲길 자원정보 수집은 산림청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국내 4천여 개 봉우리에 대한 숲길 자

원정보를 수집해, 전국 숲길을 통합, 연결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센터는 데이터 구축 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민간에 이를 제공 국민이 숲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숲길조사원 2차 모집인원은 서울·경기 등 제외 전 7개 권역에 걸쳐 총 480명으로, 응시지역은 전과 동일하게,

공고일 기준 만8세 이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9일 오전 12시까지 전자메일(123@komounta.kr)로만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omounta.kr)에서 확인 및 숲길관광실(042-620-6360)로 문의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강염병 의심되면 '1339'로